

제356회 국회  
(임시회)

#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2 호

국회 사무처

2018년1월31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상정된 안건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1

(10시03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원 (꽃을 들어 보이며)

하얀 장미를 들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신 서지현 검사를 응원합니다. 차별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이땅의 모든 여성들을 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입니다.

밀양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천 화재에 이어서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 국민들께서 받으셨을 충격이 그리고 슬픔이 더 크셨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

다. 저 역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을 중요시하고 필요한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법과 제도, 관행을 근본에서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이 그만하면 되었다고 할 때까지 끈기 있게 혁신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시급한 제도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 3법이 처리되었습니다. 필요한 추가 대책 또한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 사례를 적극 참고해서 땀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포스코 가스 누출로 하청 노동자 네 분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개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 안전 국가 건설이야말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 국가 목표입니다. 수많은 국민의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 여당은 2018년을 국민 안전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 해소에 정신없이 매달려 온 시간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의 범죄와 일탈을 과감히 바로잡아 무너져 가던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웠습니다. 추경을 통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성공했고, 사상 첫 사람 중심 예산 처리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 전략적 협력 외교의 토대 또한 복원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국정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외교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불어넣은 8개월이었습니다.

여소야대의 원내 5당 체제하에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만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으로 숭한 고비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었습니다. 야당의 초당적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것은 국민의 한결 같은 지지와 성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길잡이로 삼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밭 딛고 있는 현실을 냉정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일자리도 성장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이 위기입니다.

권력기관의 일탈과 국민의 의사와 괴리된 선거제도, 국민 인식과 시대의 변화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는 헌법,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9년간 한반도는 과거 냉전 질서로 회귀했고, 이제는 남남갈등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위기입니다.

새 정부 지난 8개월의 노력으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주한 3대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주거 불안정은 국민의 고통을 상징하는 대표적 민생 현안입니다. 정부 여당 대응 방안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임금 격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 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 상공인의 경영 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이 소비와 투자를 선도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 원입니다. 그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성실히 일한 대가로 157만 원이 그렇게 무리한 액수입니까?

입장을 바꿔 봅시다. 한 달에 157만 원으로 내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저임금 현실화는 비용의 차원을 넘어서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불공정한 경제구조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중소기업인에게 인건비 추가 부담은 걱정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감면 등 총 5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시장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원과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해 온 재벌 대기업들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통 경감에 앞장서야 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의 어깨를 짓눌러 온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약탈적 카드 수수료와 본사 로열티 문제의 경우 근본적 수술에 나서겠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 또한 확실한 민생 현안입니다.

최근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이 수억 원씩 급등하는 등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서의 내 집 마련이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뉴욕보다 3.5년이나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 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도 재설계하겠습니다.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잡도록 반드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구체적인 민생 현안에 대한 해결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사회 변화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 성공과는 달리 대한민국 전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3%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오는 202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성장판은 닫혀 가는데 지난 보수 정권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은 위기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삼성 등 일부 초거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내어도 연관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장기간·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월급봉투는 늘 제자리걸음입니다.

산업·기업·개인 간의 양극화와 불평등 역시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1998년 이후 GDP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60%대 중반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제라드 번스타인이 지적했던 고용 없는 성장, 고용절벽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당 을지로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접했던 국민들의 삶 역시 불평등과 양극화,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찬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초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 재편 역시 또 다른 위협입니다.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구조적 모순들을 바로잡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도

함께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의 대한민국, 새로운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거센 도전의 파고 속에 국민의 삶을 지키고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총의를 하나로 모으는 그릇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회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국가 운영의 방향과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 2주 전부터 사회적 대타협의 깃발을 들고 주요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소상공인단체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모든 경제주체들 역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노사정 대표 6자 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했던 사회적 대화기구 복원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흥금 없는 대화와 토론이 이어져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노사정위원회의 복원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 조성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기본 구조는 두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연대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내자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었습니다. 여야가 사회적 대화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야 대타협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 역시 정치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그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정치권과 경제주체 모두의 대

승적 결단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타협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양보와 고통 분담입니다.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의 적극적인 중재 끝에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사이에 맺어진 상생협약은 고통 분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소비 침체로 인한 가맹점의 고통을 본사가 함께 분담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역시 사회적 대타협이 나아가야 할 또 다른 방향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기존보다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대신 기업은 미래형 친환경차 생산 설비에 투자하고,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필요한 복지를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파리바게뜨의 상생협약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위기 극복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양보와 타협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경제계와 노동계에게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한 한국형 사회적 연대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특히 우선 당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에 통 큰 협력을 당부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을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휴식과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법과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상생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을 위해 동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함께 행복하자'라는 정신은 해당 아파트를 넘어서 지역사회 전반에 협력적 동반자 문화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정신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 추가 당부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장관관도 바뀌었지만 국민들은 아직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은 공직사회에 일대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제주체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복지와 안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정책 생산과 집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 양보와 고통 분담에 달려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의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사회적 대타협과 함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혁신·사람, 이 3대 성장전략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입니다.

첫째, 공정경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정직한 땀이 온전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약탈적 시장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재벌 대기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기술 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탈 등 시장 교란행위를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는 행위는 국민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 공정 시장질서 확립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에서 힘을 모아서 통과시킵시다.

재벌 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도 나서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벌 대기업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혁신성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혁신 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중국의 제조업 2025 등 세계는 바야흐로

로 혁신의 각축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혁신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의 DNA가 사회 전반에 고루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인프라, 제도,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선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습니다.

합리적 규제 혁신도 필요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은 물론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이어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기술 중소기업과 벤처에 과감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구개발 관련 지원 예산을 2020년에 국가 예산의 1%까지 확대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여당이 앞장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람투자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보수 정부는 일부 대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낙수효과의 망명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결과는 흑독했습니다. 성장의 기반은 붕괴됐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소득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자산불평등 역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무너진 민생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람투자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2018년 예산은 사람투자 패러다임의 출발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담대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기준 GDP 대비 10.4%인 공공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 수준인 21.6%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주요 OECD 국가들 또한 2016년 이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세제 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

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람투자의 또 다른 축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목표 또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만 극도로 위축된 민간부문의 고용시장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물론 실업과 양극화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까지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람투자 패러다임 정립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여야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문제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로드맵은 물론 사회적경제 3법 처리에 대한 대승적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 또한 사람투자 국가의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너무나도 고되고 위험합니다.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이고 산재사망률은 가장 높습니다.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도 10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연말 인천공항공사 노사가 정규직화 물꼬를 텃습니다. 노사 합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건설공사 발주 시 적정 임금 의무화를 확산시키고 원청의 책임성을 높여 산재를 대폭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3권 보장은 노동존중사회의 기본입니다. ILO 핵심 협약 기준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박수 치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힘없는 이들이 부정과 불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민생 또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도 3대 성장전략의 완성도 민주주의의 뿌리가 더욱 깊고 단단해질 때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이라는 3대 정치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첫째, 권력기관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은 특정 개인이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의 시정과 제도 개혁을 의미합니다.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의 제도적 복원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초에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문재인 정부는 결코 권력기관 장악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권력기관을 장악하려 했다면 권력을 집중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겠습니까?

공수처장 역시 야당의 국회 추천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부당한 정치탄압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하는 권력기관 민주화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둘째, 국민의 의사와 합치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성 강화와 참정권 확대가 핵심입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통해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연대와 협치와 같은 대화와 상생의 정치 또한 꽃피울 수 있습니다. 이미 비례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들이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냅시다.

참정권 확대도 더 늦출 수 있는 그런 개혁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마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참정권 확대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우리 바로 추진합시다.

셋째, 국민개헌으로 더욱 튼튼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은 87체제가 수립된 지 꼭 31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6월 항쟁을 통해 우리 사회는 대통령직선제를 근간으로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넘어 경제, 언론,

노동, 복지 등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IMF와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며 국민의 삶은 무한경쟁의 벼랑으로 내몰렸습니다.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독버섯처럼 퍼진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깊이 병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순과 왜곡이 일거에 터진 것이 바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권력과 재벌의 부정한 결탁과 담합, 특권층의 반칙과 편법 등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정치제도의 민주화에 그친 87체제의 한계이자 모순입니다.

국민개헌은 현행 헌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단순히 권력제도를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틀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의 지평을 사회경제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권력제도 개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 상생과 협력의 정치질서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개헌 의총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입니다. 국민의 변화된 인식과 요구에 맞추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과 관련해 한 가지 더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야당에게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 일정 준수를 촉구합니다. 이후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보다 속도를 낼 것을 호소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아흐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백수를 넘기신 노모가 계십니다. 지난 2010년 어머니께서는 최고령 이산가족으로 북에 두고 온 제 큰누이를 60년 만에 만났습니다. 2박3일간의 짧은 만남 뒤 이별의 순간 작은 버스 차창을 통해 마지막으로 잡았던 누이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만날 때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한 곁

이의 기쁨과 헤어질 때 뼈가 끊어지는 고통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 어머니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희망은 평창 올림픽입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가족들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 헤어진 가족과 살아생전에 재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통해 끊어졌던 대화의 통로가 다시 이어지고 영긴 긴장의 실타래가 풀어진다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평창으로 문을 연 남북관계 해빙의 효과는 이산가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한 참가로 세계는 이미 평창을 평화라 부르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역시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평화의 강력한 메시지가 전파되게 될 것'이라고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인 92개국, 3000여 명 선수단은 물론 21개국, 26명의 각국 정상급 인사들도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의 축제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또한 막대합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가 진행될 경우 대외신인도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도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금융시장에선 우리나라의 국가부도위험지수가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남북 협력이 심화돼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될 경우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과 성장 동력도 갖추게 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물론 우리 청년들의 미래 또한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인 것입니다.

제가 올림픽을 둘러싼 정쟁을 중단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평창 올림픽을 성대히 치러내고 이를 통해 평화와 민생의 문을 활짝 열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미 지난 2011년 여야는 평창 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통해 남북 단일팀 구성과 체육 교류 확대에 뜻을 모았습니다. 야당도 올림픽의 성공과 남북 평화를 바라고 있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결의안 처리에도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한 세기 전 국론 분열로 망국의 고통을 겪었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남북 관계와 같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국민적 협력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제는 평창 이후입니다. 정부 여당은 평창을 통해 어렵게 조성된 대화 분위기가 본격적인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자간 협의의 틀을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역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북한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과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는 억지로 얻어 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 등 그동안 북한의 도발은 우리 국민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되풀이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 약속 파기가 우리 국민에게 심어 놓은 깊은 불신도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평창을 통해 남북이 이렇게 맞잡은 두 손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문을 함께 활짝 열 수 있도록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라는 3대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근원적 처방은 결국 국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는 문제 해결은커녕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 신뢰도 평가에서도 창피하게 꼴찌입니다. 갈등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갈등과 정쟁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성과를 내는 국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온 법사위 개혁이 필요합니다.

66년간 지속되어 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낡은 제도입니다. 상임위 논의 결과가 존중받도록 이 제도를 고칠 때가 되었습니다.

국회도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합니다. 국민들

이 국회 의사결정에 보다 폭넓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의 기능을 보완할 시민의회를 제안합니다.

시민의회(의회배심제)는 당장 국회 내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최종 의결권은 국회가 행사하되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등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담장을 허물고 국민에게 국회 마당을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되돌아왔다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에 달려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과감하게 현실로 옮기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닌 아픈 곳입니다. 정치의 중심 역시 국민이 아파하는 곳입니다. 힘없고 백 없는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입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인 민생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정치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30여 년 전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도, 을지로위원장으로서 피눈물 흘리는 국민의 손을 맞잡았을 때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연단에 오른 지금도 저의 삶을 채운 고민은 민생이었습니다.

다시 1년 전으로 시곗바늘을 돌려봅시다. 평범한 국민이 촛불광장에서 꿈꿔 왔던 것은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상식, 성실한 노동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희망,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꿈들을 우리 정치가 실현해 냅시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엮고 한반도 평화로 민생의 지평을 넓게 열어 갑시다. 갈등과 정쟁을 넘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갑시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정세균 우원식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가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할 경우에 연설 도중에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관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교섭단체 간의 박수 경쟁으로 흐르면 연설의 품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좋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번만 몰아서 박수를 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이나 외국의 국가원수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간에 박수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 의원(255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희	김종훈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남인순
노웅래	노희찬	도종환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김 영 춘 김 영 호 김 용 태 김 정 우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미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도 중 환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흥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정 박 주 민 박 주 현 박 준 영  
 박 찬 대 박 찬 우 박 흥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해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석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 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성 업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욱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동 섭 이 상 돈 이 석 현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이 훈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동 영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정 태 욱  
 제 윤 경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웅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국)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흥 영 표 흥 의 락 흥 의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희  
**○출장 의원(2인)**  
 문 진 국 임 이 자  
**○청가 의원(14인)**  
 금 태 섭 김 순 례 김 정 재 김 진 태  
 나 경 원 서 형 수 성 일 중 심 재 철  
 이 상 민 이 용 득 이 장 우 이 혜 훈  
 정 갑 윤 황 영 철  
**○국회 참석자**  
 사 무 총 장 김 교 흥  
 의 사 국 장 권 영 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이 낙 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 동 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 상 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외 교 부 장 관 강 경 화  
 통 일 부 장 관 조 명 균  
 법 무 부 장 관 박 상 기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김 부 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 중 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 영 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 운 규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후  
 환 경 부 장 관 김 은 경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김 영 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정 현 백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김 현 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김 영 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 중 학  
**○출석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 형 권  
 국 방 부 차 관 서 주 석  
**【보고사항】**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여성가족	신보라	조훈현	자유한국당	2018. 1. 30.

**○의안 제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18. 1. 30. 이채익·박맹우·최연혜·정갑윤·  
 강길부·이현재·정유섭·홍문중·원유철·  
 김규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채이배 · 권은희 · 김경진 · 김삼화 · 김성수 · 신용현 · 심기준 · 오세정 · 이동섭 · 이태규 · 조경태 · 하태경 · 황주홍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8. 1. 30. 김민기 · 신창현 · 윤관석 · 노웅래 · 전재수 · 강훈식 · 오영훈 · 김영진 · 정성호 · 김현권 · 김병욱 의원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8. 1. 30. 김민기 · 신창현 · 윤관석 · 노웅래 · 전재수 · 강훈식 · 표창원 · 오영훈 · 유동수 · 김영진 · 정성호 · 김현권 · 김병욱 의원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 30. 김경진 · 심기준 · 황주홍 · 정동영 · 최도자 · 이동섭 · 송옥주 · 박주민 · 노웅래 · 김광수 · 김해영 · 김중로 의원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8. 1. 30. 유기준 · 조경태 · 정유섭 · 이명수 · 이은권 · 이현승 · 이진복 · 金成泰 · 윤상현 · 윤상직 · 권석창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유기준 · 조경태 · 정유섭 · 이명수 · 이은권 · 이현승 · 이진복 · 金成泰 · 윤상현 · 윤상직 · 권석창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이현승 · 박덕흠 · 임이자 · 정태욱 · 박맹우 · 김성원 · 이진복 · 김도읍 · 강석호 · 서청원 · 정갑윤 · 이학재 · 유재중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정갑윤 · 김도읍 · 박맹우 · 김명연 · 金成泰 · 김석기 · 성일중 · 원유철 · 이현승 · 김종석 의원 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8. 1. 30. 양승조 · 오제세 · 윤소하 · 김해영 · 안호영 · 강훈식 · 김종민 · 조정식 · 김상희 · 어기구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김민기 · 신창현 · 윤관석 · 노웅래 · 전재수 · 강훈식 · 오영훈 · 유동수 · 김영진 · 정성호 · 김현권 · 김병욱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

(2018. 1. 30. 권석창 · 윤한홍 · 김성원 · 윤재욱 · 이명수 · 엄용수 · 황영철 · 박덕흠 · 안상수 · 이양수 · 박인숙 · 유민봉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8. 1. 30. 문진국 · 윤한홍 · 임이자 · 장석춘 · 이찬열 · 정성호 · 김재경 · 서형수 · 박대출 · 함진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원유철 · 박덕흠 · 임이자 · 조훈현 · 이채익 · 김순례 · 이양수 · 박맹우 · 김선동 · 정우택 · 서청원 의원 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18. 1. 30. 이채익 · 정갑윤 · 이현재 · 최연혜 · 정유섭 · 박맹우 · 홍문종 · 강길부 · 김종훈 · 원유철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 30. 정춘숙 · 양승조 · 소병훈 · 김병욱 · 김정우 · 남인순 · 김상희 · 한정애 · 권미혁 · 심기준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김민기 · 신창현 · 윤관석 · 노웅래 · 전재수 · 강훈식 · 오영훈 · 유동수 · 김영진 · 정성호 · 김현권 · 김병욱 의원 발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김민기 · 신창현 · 윤관석 · 노웅래 · 전재수 · 강훈식 · 오영훈 · 김영진 · 정성호 · 김현권 · 김병욱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유기준 · 나경원 · 조경태 · 정유섭 · 이은권 · 이현승 · 이진복 · 金成泰 · 윤상현 · 권석창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이재정·이춘석·백혜련·윤호중·  
남인순·오영훈·이용득·기동민·박남춘·  
정재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이정미·김종대·노회찬·심상정·  
윤소하·송옥주·추혜선·김경협·정성호·  
김종훈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조정식·김영진·유동수·전현희·  
원혜영·윤관석·남인순·김정우·박완수·  
심기준·윤영일·노웅래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신창현·이개호·송옥주·전혜숙·  
노웅래·정춘숙·홍의락·김병욱·남인순·  
박홍근 의원 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조정식·김영진·유동수·전현희·  
원혜영·윤관석·남인순·김정우·박완수·  
심기준·윤영일·노웅래 의원 발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조훈현·최연혜·김명연·김석기·  
송희경·원유철·김한표·곽상도·윤종필·  
김규환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하태경·노웅래·이원욱·지상욱·  
유의동·정병국·박인숙·김관영·김종대·  
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26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